

김민석 취임 한달, 민주 지지율 하락에 ‘입법·통합’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 36.1%… 국힘에 6%p 밀려
정기국회 쟁점 입법 처리로 돌파
친명·친청 갈등 봉합해 원팀 과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달을 맞은 가운데,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메가특구특별법과 부동산 공급 확대 법안 등 정기국회 쟁점 입법 처리로 민심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김 대표는 친청(친정청래)계와 거친 네거티브 공방 끝에 당권을 잡은 만큼, 당내 통합을 위한 포용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40%대의 견고한 정당 지지율을 기록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안팎으로 앞섰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30%대로 지지율이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응답률 3.6%, 표본오차는 95% 신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공공성장화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수준에서 $\pm 3.1\%$ 포인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1%로, 42.1%를 기록한 국민의힘에 6%포인트 뒤졌다.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불린 김 대표의 취임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 후에도 ‘컨벤션 효과’ 없이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서울에선 국민의힘에 14.1%포인트, 18~29세에선 46.5%포인트, 30대에선 15%포인트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오며 서울과 청년세대의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같은 지지율 하락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쟁점 입법을 처리하고 당 내부 통합으로 지지를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대표는 17일 민주당TV의 코너 ‘민티07’에 출연해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

령을 임기 1년에서 2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러저러한 일시적인 지지율의 굴곡에서, 또 내우외환에서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당정일치’를 기반으로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 입법 처리에 나선다. 먼저 첨단기술 기업 발전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처리를 노린다. 또한 용산공원특별법 등 서울 내 청년 거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법안을 정기국회 처리 목표 법안으로 설정하고 야당을 설득 중이다.

친청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갈등을 치유하고 당을 통합해 ‘원팀’으로 만드는 작업도 김 대표의 당면 과제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과반을 잡지 못해 선호투표제를 거친 끝에 54.08%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에 당선됐다. 친명계를 대리하는 김 대표와 당 대표 연임을 노렸던 정청래 전 대표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대표는 ‘민티07’ 방송에서 정 전 대표가 전당대회 내내 사용한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4통 통합을 넘어 지도자와 우리 당원, 지지자들을 다 포함하는 온통 통합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방위 대통령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며 “한편으로는 당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서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진보세력 연대와 관련해 조국혁신당과 합당·연대 논의도 추진해나간다고 했다. 다만, 합당 및 연대의 세부 조건을 따지는 과정에서 김 대표와 조국혁신당 측의 신경전이 벌어지며 향후 관계 설정과 실제 합당 추진 구체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여론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선거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승원 임명 강행에… 국힘, 대여 공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 인사실패’ 정조준
22일 국민보고대회로 장외투쟁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임명 강행을 추진하자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와 사법리스크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이재명 정부 실정 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추석 이후에도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도 마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자,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검증은 원천 봉쇄한 채 정해진 결론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전횡에 결코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압박은 후보자 개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법무부장관과 강신철 국방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는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의 문제를 넘어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 해소용 방패로 만드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못 박았다.

당 지도부 역시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면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이라며 “김승원 인사청문회는 보기에도 낮 뜨거

운 저질 코미디였다”고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과거 ‘조국 사태’에 빗대며 여권의 인사문제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뿐 아니라 민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향후 이 대통령의 임명 여부까지 묶어 정부·여당의 인사 검증과 도덕성 문제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 지명 철회하겠다. 연임 공소 취소 없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법무부장관 청문보고서 민주당 단독 처리

국민의힘 “요식행위”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표결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만이다.

김 후보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경구용 치료제 제넨셀의 임상 승인을 위해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민원 전화를 한 의혹과,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관련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박형수 법사위 야당 간사는 법사위 퇴장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법사위 여당 간사는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다 알겠지만, 위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다”며 “밤사이 청와대의 오더를 받았는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청문보고서를 상정하여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李, IEA 총장과 ‘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

〈국제에너지기구〉

李 “중동發 에너지 전환 큰 장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파티 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만나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를 사무총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국제에너지기구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한데, 최근에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 전환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서 국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비를 사무총장은 “지금 전 세계는 엄정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기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시스

난 대규모 에너지 위기를 마주하고 있고, 이는 여러 경제들의 큰 역할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접견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예진 기자 syj@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형사사법 개편 후속법도 처리

국회가 17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담겼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정됐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경우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 후속조치 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부

수 법안에도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신청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소청법·검사징계법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앞서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소위 회부 없이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했다.

/박태홍 기자